

# 도시가스사의 부당행위 이젠 근절돼야



대한설비건설협회 기술지원실 겸 가스시공지원부  
실장 이 용 권

**가**스설비시공업체에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등 도시가스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월권행위 방지를 위해 가스안전공사, 가스시공업계, 도시가스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가칭 '가스안전협의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일부도시가스사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술검토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자체시방에 따르도록 강요 행위, 특정물품 강매 등의 월권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시공업계는 시공원가 상승 및 민원 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아 수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자부가 도시가스사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협회는 가스시공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기업경영 및 현안 문제

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부 도시가스사로부터 강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부 도시가스사가 판매하는 제품 구입 및 특정제품 사용을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자원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및 100여개 가스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일부 도시가스사가 월권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하여, 가스시공업체(설비건설협회), 도시가스사(도시가스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스안전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도시가스사의 과다서류 제출요구 및 월권행위 방지는 물론 공통된 제출서류의 표준화 등 도시가스 발전을 위한 협

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동안 도시가스사의 부당행위는 항상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시공업체들은 도시가스사로부터 정압기, 메타기, 가스보일러 등 특정물품 구매를 강요받거나 자체시방 및 공급전안전점검 강요, 법에서 규정된 이외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항상 시달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시공업계는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민원 증가, 인력 소요 등의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가스공급지연까지 이어져 올며 겨자 먹기로 도시가스사업자의 불공정한 관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시공업체는 공사물량 감소 및 업체간 과열경쟁, 원자재 값 상승, 적정가 이하로 형성돼 있는 시공단가 등의 이중고까지 겹쳐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공자가 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공사를 수주하여 도시가스회사와 사전협의 시 특정제품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또한 법령에 없는 서류 외 과도한 서류제출 강요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필한 서류에 대한 변경 요구 시 법적 처벌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IT산업의 발달로 사회적인 흐름이 투명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도시가스사업자들의 부당행위 만연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 시공업계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만을 탓하지 않고 자체적인체질 강화 등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신기술 및 공법개발과 경영혁신,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부응하고 고품질의 공사 및 완벽시공을 위해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업체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책 및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업계가 고루 발전 가능하다. 먼저 무자격 시공업자에 대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스시설시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전기공사법과 같이 가스공사법도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도시가스사업법을 시공업계 업무에 적용하기엔 적절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가스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를 비롯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스시설시공업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도시가스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도시가스사는 시대변화 및 기술발전, 도시가스 사고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에 안전관리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들은 정작 ‘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시공업체에 규제를 강화하려 하는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일부 도시가스사들이 시공업체에 대한 월권행위를 인정했으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와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업계 및 가스시공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상호간에 득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와 대등한 관계로 도시가스 수요개발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중요한 협력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스시공업계의 공사단축을 위해 도시가스사는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